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2009) 635-654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최 병 두**

Multi-Cultural Space and Glocal Ethics : From Cultural Space of Transnational Capitalism to Space of Recognition Struggle*

Choi, Byung-Doo**

요약 :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여러 학문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에도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이주와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이 공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과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구적 이주 배경을 경제·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속성을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탈지구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어 : 국제이주, 다문화공간, 다규모적 접근, 다문화주의, 인정의 공간, 인정과 재분배의 정치

Abstract : Recently, concept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or multiculturalism have been not only widely discussed across several disciplines, but also actively promoted in government's policy, as the in-flow of foreign immigrants has increased rapidly. This paper suggests the term 'multicultural space' instead of multicultural society in a sense that both international migr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accommodation to a certain locality presuppose a spatial dimension.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the term multiculturalsim should be used very carefully, because this term includes a normative character implied in a sense of recognition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and difference on the one hand, and an ideological one reflected on strategic policies of capital and the state on the other. On the basis of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tries to reformulate spatially the concept of muticultural society which has been supposed to be constructed due to rapidly increasing foreign immigrants, emphasizing some usefulness of multi-scalar approach. It then analyzes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providing a criticism of multiculturalism as an ideological logic of capital and the state in transnational captialism. Finally it put a stress upon importance of struggle for spaces of recognition as a new glocal ethics in the age of post-globalization.

Key Words : inter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 space, multi-scalar approach, multiculturalism, spaces of recognition, politics of recognition and of redistribution.

1. 서 론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에는 단순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 전문직종사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증대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양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나아가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양상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을 향한 제3세계 국가 국민들의 초국가적 공간 이주와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인종적 및 문화적 혼합에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이 논문은 제 5차 동아시아 대안지리학대회(서울, 2008.12.13~16)에서 기조발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bdchoi@daegu.ac.kr)

따라 형성된 사회공간은 학문적 및 정책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는 흔히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나 이념들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1]. 이 글에서는 우선 다문화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과 개념들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배경으로서 지구-지방화(glocalisation) 과정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치적, 사회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이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공간의 형성과정, 나아가 최근 사회이론 및 철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의 의의와 이에 함의된 주요한 인식론 또는 방법론으로서 다규모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의 유의성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공간의 형성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간이 그 자체로서 구조화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는 이른바 후기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요구되는 지구-지방화, 특히 지구적 차원의 지역불균등발전을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이윤추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재구조화로서 지구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불균등하게 발전한 지구공간에서 자본의 이동과 더불어 노동의 이동을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자본의 이동이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노동의 초국가적 이주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들과 이들에 체현된 상이한 문화들이 혼합된 다문화공간이 형성되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공간이 후기(또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으로서 가지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으로서 다문화공간이 불가피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다문화공간의 대안적 윤리에 관한 연구도 중요성을 가진다. 사실 다문화공간 또는 이에 전제된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연적으로 어떤 규범성을 함의한다. 물론 현실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착지에서의 적응과정은 두가지 측면, 즉 소득재분배 및 노동의 재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또는 계급적 측면)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위한 권리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또는 인종적 측면)을 가진다. 이 두가지 측면은 분리된 것이라기보다 서로 연계되어 일정한 연속성 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측면에서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이주자의 인권이나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물질적 재분배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의 정의(justice for recognition) 또는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계급적 측면을 본연적으로 내재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공간적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 논문은 지구화 과정의 성숙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공간의 개념화와 더불어 그 정치경제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우선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구적 이주 배경을 경제·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비판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국지적으로 형성된 다문화공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다규모적 접근에 기초한 다문화공간의 개념화

1) 공간적 전환과 다규모적 접근

최근 철학 및 사회과학에서 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는 공간을 자신의 핵심적 연구주제로 다루는 하비(Harvey)와 같은 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르페브르(Lefebvre)나 푸코(Foucault), 기든스(Giddens), 카스텔(Castells)과 같은 철학자나 사회이론가들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관심의 증대는 단순히 이들의 학문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이론들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사회이론에서 공간에 관한 관심 증대는 첫째 새로운 공간적 현상들의 발생(즉 새로운 공간적 주제의 등장), 둘째 현상들을 설명(또는 비판)함에 있어 기존 이론들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르페브르, 푸코, 기든스 등은 공통적으로 근대성(modernity)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근대성과 일상생활에 관한 비판적 연구에서 르페브르(Lefebvre, 1990)는 서구의 근대성에 내재된 이원론(주체/객체, 정신/물질, 이성/신체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원론에 의한 공간의 개념화, 특히 선험적 (또는 절대적, 추상적) 공간으로의 개념화는 공간이 사물들의 관련적 관계로 규정되며, 사회적 생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근대적 공간성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강조한다. 푸코는 이러한 근대성에 내재된 지식/권력이 항상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역사가 공간의 역사로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든스 역시 서구 근대성을 시간과 공간의 분리 그리고 장소귀속성의 상실, 시공간적 거리화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공간이 강조되는 또 다른 거시적 주제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련된다. 이에 관한 논의에서 르페브르는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자본의 축적과정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이나 또는 노동 착취를 위한 사회적 통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축적을 위한 이러한 활동 자체도 공간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위한 공간들이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간들이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고, 공간환경 자체가 상품화되면서 자본축적 과정의 주요 요소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1996)는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서구 이론들이 이성(마르크스주의의 경우 계급)의 승리를 전제로 한 시간적 목적론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 발전과정에서 파편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적 현상들은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시간의 특권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제시한다. 크랭과 트리프트(Crang and Thrift, 2000, p.i)에 의하면, 최근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공간적 전환'은 "현재의 복잡하고 분화된 세계에 관해 사유하기 위하여 지리적 개념과 은유를 사용하기"로 정의된다.

최근 이러한 공간적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주제로 지구화/지방화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현상들이다. 즉 지구화는 "공간적 전환, 보다 정확히 말해 시간적인 것에 대한 공간적인 것의 주도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된다(Dirkik, 2001, 6; Jessop,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인식은 제솝(Jessop)에 의해 "지구화는 사회과학에서의 '공간적 전환'을 유도하는 힘들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즉 "지구화가 근본적으로 공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간, 장소, 규모의 이슈들에 민감한 접근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다. 게다가 우리가 지구화를 이러한 용어들로 접근하게 되면, 이는 다른 이슈들이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변화시키게 된다. 공간적 전환은 따라서 주제적(thematic)이고 방법론적이거나, 양자 모두이다"(Jessop, 2002, 97). 이러한 지구화의 공간적 개념화는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개념이나 사고들, 예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개념화는 기존의 사회이론들이 간과하거나 은폐하고 있었던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드러내어 준다. 첫째, 공간적 개념화는 사물들의 위치성 또는 사물들 간의 공간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사물의 본질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은 모든 사물들을 위치지우며, 그들 간 관계를 규정한다. 물론 공간은 이러한 사물들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위치와 그들 간 관계로 형성되고 변화하고 소멸된다. 사물들의 위치성과 그들 간 관계로 형성되는 공간은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차이는 사물들의 속성을 규정한다. 이 점은 사람들 간에도 적용된다. 공간은 사람들 간의 관계로 형성되며, 이러한 점에서 공간은 간공간(in-between space)으로 형성·소멸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행동은 사회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재생산하게 된다.

둘째, 공간적 개념화는 사회적 상호행위가 사회적 제도의 '장기-지속'을 통해 사회공간적으로 구조화되며, 이러한 구조가 다시 상호행위를 조건지우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행위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사회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공간적으로 구조화된다. 이렇게 해서 구조화된 사회공간적 체계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분절적이며 장소-특정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행동들은 분절적 장소특정적 다지방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소재와 의미를 생산하게 되며, 또한 이렇게 형성된 물질적, 담론적 구조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화는 '다지방화 과정'이라는 주장이 이해될 수 있다. 즉 제솝(Jessop, 2002, 98)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화는 "많은 규모들에서의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은 체계화된 계층에 포섭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융합된 방식으로 상호 공존적이고 침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과 더불어 규모적(scalar) 힘을 발전·강화"시킨다.

셋째, 공간적 개념화는 현상들에 관한 메타포로서 동원되며, 때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힘관계를 반영 또는 은폐하고, 심지어 헤게모니적 개념화로 이용되기도 한다. 세계체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중심/주변, 남/북, 제1세계/제3세계 간의 관계는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저발전한 후진국들 간 관계를 표현하는 공간적 메타포이다. 이러한 공간적 메타포는 실제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 즉 지구적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불균등발전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 관한 근대적, 헤게모니적 개념화는 '타자'의 공간성을 주변화시키고, 정치적 힘을 억압 또는 제한한다. 이러한 정치적 힘관계란 공간을 점유하고 상호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아/타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계의 공간성에 관하여 말하는 방식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공간적 개념화는 대안적인 사회공간적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한다. 즉 공간은 사람들 간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차이에 의해 공간적 질서가 형성된다. 사물들의 내재적 관련성(예로, 책과 책상 간의 관계)을 통해 형성된 공간적 질서는 안정적이며, 사람들에게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사물들 간에 내재된 공간적 질서는 외적으로(예로, 자본에 의해 구성된 현대 도시공간의 질서) 또는 인위적으로 (예로, 권력의 장악과 유지를 위해 구성된 원형감옥의 공간질서) 부여된 관계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적 관계(예로, 사람들 간 관계에 내재된 인간성, 나아가 사람과 자연 간에 내재된 생태성을 반영한 공간질서)에 기초한다. 이러한 본연적인 사회공간적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공간적 개념화에서 다문화공간의 개념화 및 분석과 관련된 방법론으로 다규모적 접근에 대한 관심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규모적 접근은 앞서 언급한 공간적 개념화의 기본 특성들을 함의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경계된 영토를 초월하는 공간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한 방법론이다. 즉 다규모적 접근은 개인의 행동이 다중적 규모들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제도들은 개인들의 물리적 행동이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 물론 여기서 국지적, 지역적, 또는 심지어 국가적이거나 지구적이라고 할 때에도, 그 규모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규모의 구성 또는 생산에서 개인(특히 예로 외국인 이주자)은 다중적 규모들 내에 위치지워지고, 이에 따라 개인행동의 의미나 정체성은 다중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규모들 간을 이동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능력을 고양/약화시킬 수 있다. 즉 규모들 간 관련성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쟁은 규모들 간 이동을 만들어내고, 다른 규모들(특히 보다 높은 규모)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jumping scales) 개인의 능력이 강조될 수 있다(Smith, 1993). 예로, 초국가적 자본가들은 이러한 '규모 뛰어넘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 내에 위치지워져 있거나 이동성이 낮은 노동계급들을 지배하게 된다. 다른 예로, 님비현상에서처럼, 개인적, 국지적 차원에서는 부정되지만,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강제되는 활동들은 다규모적 갈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Cidell, 2006). 또 다른 예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 이는 규모적 부조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규모의 구성 과정은 제도적 차원에서 정치권력의 영역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지구화 과정은 국민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흔히 이해되지만, 실제 국민국가의 권력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규모를 가로질러 위로 그리고 아래로 '재규모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설명된다. 스윈거도우(Swyngedouw, 1997)에 의하면,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재구조화와 이에 따라 국지적 장소에 미치는 영향은 영토적 권력의 재규모화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제적, 영토적 재구조화와 관련된 국민국가의 재규모화는 '지구-지방화'(glocalization)라고 개념화된다. 또한 규모의 생산은 현상들이 이해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법의 수준을 창출하는 것이다. 브레너(Brenner, 1998)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규모적 조정'(scalar fix)은 자본의 이동성과 고정성 간 모순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다)규모적 접근은 공간적 개념화에 주요한 방법론으로 강조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공간의 개념이 그러한 것처럼, 규모라는 개념도 어떤 실체를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로, 규모에 관한 Smith(1992)의 유형 분류에 의하면, 규모의 중층성은 신체 공간에서 시작하여 지구 공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신체는 개인적 정체성의 우선된 물리적 장소이며, 이 규모에서 젠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규모의 개념화는 규모 그 자체가 어떤 실체를 가지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다. 물론 예로 성의 상품화나 에이즈와 같은 경우 신체 공간은 개인의 규모를 넘어서는 중층적 규모들에서 신체를 정치화하기 위한 투쟁을 유발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특정 실체들이 특정 규모의 공간에서 가지는 관련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다규모적 방법론은 규모 또는 행위(실천) 가운데 어디에 연구의 초점을 우선 두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펙(Peck, 2002)은 개인들이 다른 규모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지역, 국가, 지구 차원의 규모들에서 행위들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다소 다르게, 맨스필드(Mansfield, 2005, 469)는 상이한 규모들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어떤 한 행위의 규모적 차원들에 관한 고찰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들은 구조와 행위 간 관계에서 어디에 우선된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이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행동은 우선적으로 그 가정공간의 규모에서 조건지워질 것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주자의 이주 전 경험한 규모들에서의 문화와 접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초점은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들의 다규모적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생산이나 규모의 정치 등 규모에 관한 주장들은 한 규모 내에서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규모의 다중성을 강조하면서, 높은 차원의 규모는 낮은 차원의 규모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 브레너나 스윈거도우는 규모의 갈등이나 정치를 논의할 때, 특정 규모에서 작동하는 힘 또는 정치는 그 규모 내에서 동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지리적으로 큰 규모들이 작은 규모들에 비해 더 큰 힘(규정력)을 가지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이주자의 경험은 높은 차원의 규모에서 작동하는 힘(예로, 지구공간 차원의 불균등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반면, 자신의 개인적 삶의 질이나 물질적 만족 등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규모는 비계층적이며, 유동적이고 관련적이라는 주장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의의

최근 들어 지구적 차원에서 상품과 자본, 기술이나 정보 등의 세계적인 교역 증대와 더불어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주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문화적 교류와 혼합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다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국제적 이주에 직접적 관심을 가지는 지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의 정책적 과제들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나 그에 함의된 규범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철학적, 문학적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이론적 철학적 논의나 정책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이다.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때로 상호 갈등적/비판적 함의들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되거나 고려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적 교류 및 혼합과 관련된 현상과 정책, 그리고 규범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①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혼재에 따라 발생한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인구학적 현상, ②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과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배제주의 및 동화주의 정책과는 대조된다),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함의된 규범적 측면(인정의 정의, 민주주의 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정형화하고자 하는 철학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Troper, 1999; 윤인진, 2008a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은 물론 공간적 함의를 가지며, 이미 공간적 용어들로 해석되고 있다. 즉 오늘날 문화적 교류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개별 국지적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증대에 따른 문화적 혼합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와 혼합은 지구-지방적으로 새로운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문화공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현상들을 공간적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된 주제들을 새롭게 드러내고 또한 기존의 논의들을 재서술함으로써 보다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급증하는 문화적 교류와 혼합의 현상, 정책, 그리고 규범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로 다문화공간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간의 만남과 상호행동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일상적 상호행동은 새로운 다문화공간을 사회적으로 구성(또는 생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재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공간은 외국인 이주자가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일상적 생활공간을 뛰어넘는 초국지적 또는 초국가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상호 부재 속에서 네트워크 연계로 형성된 일시적 공간이지만, 생활공간 속에 간헐적으로 개입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또한 떠나온 과거의 공간도 아니고 새롭게 정착한 지역에서의 공간도 아닌 이른바 경계적 간공간 또는 '제3의 공간'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다문화공간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유지/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힘의 장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기존의 문화공간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를 위한 정치를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연구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공간의 개념화를 위한 과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예비적 단계에서, 다문화공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문화공간은 지구적-지방적 차원에서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 및 혼재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담지한다. 즉 다원화된 사회인구학적 현상으로서 다문화주의를 반영한 다문화공간의 개념은 지구적 공간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성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지식이나 정보의 교류 증대, 그리고 기업 활동이나 관광, 유학 등을 위한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 특히 보다 장기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교류가 발생하는 현상 및 그 배경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개별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접합하면서 변화해나가는 현상들의 특성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예로, 다문화공간은 아침 식탁에 올라온 다양한 외국산 식

품들의 생산-유통-소비과정과 관련된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거나,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는 TV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나 지식의 실시간대 이동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초공간적 사이버공간의 다문화성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다문화공간은 가장 직접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제적 이주와 새로운 지역사회에의 정착과 관련된 문화적 교류 및 혼합과 관련된다. 즉 오늘날 대규모 사람과 문화의 역사적 이동으로 형성된 다문화주의는 그 규모에서 지구적/지방적이며, 특히 지구적 도시화(glurbanization)과정에 의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도시들은 다문화주의의 도전으로 점차 특징지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Keith(2005)는 "문화교류의 극장, 혼종적 정체성의 수행을 위한 무대로서 범세계주의적(cosmopolitan) 도시는 회의 공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재생의 공간으로 안정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문화적 모자이크'에서 '범세계적 용광로'로 이행해가는 도시들에 관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를 보다 명시적으로 사용한 Uzer(2008)는 베를린에 있는 터키 출신 이주자들에 의한 상이한 공간 이용 방법들과 이에 의해 유도되어 실제 '혼종적 [공간] 편성'(hybrid [spatial] configuration)을 이루게 되는 '다문화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multi-cultural space)을 고찰하고자 했다[2].

둘째, 다문화공간은 지구-지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와 혼합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반영한 다문화공간은 문화적 교류 및 혼합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 또는 일방적인 통합(즉 동화)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는 흔히 다문화도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다문화공동체에 관한 계획과 관련된다. 예로 "일상생활은 다규모적 실천과 경험의 형태 속에서 '다문화적 도시'의 초국적 관계들, 즉 상이한 문화와 상이한 상상력 간의 만남에 의해 점차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 서구 도시들에 관한 연구가 강조된다(Simonsen,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적 도시'를 주요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부각시키고, "세계의 여러 사회들이 점차 다문화화되어 감에 따라 계획가들은 다양성에 보다 민감해질 필요"가 있으며, 통합과 분화, 포용과 배제, 조화와 갈등이 다문화적 도시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들이 인정되고 균형 잡힌 다문화공동체(multicultural communities)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Uyesugi and Shipley, 2005).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공간의 경험적 현상이나 정책들에 관한 비판적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로, 다문화공간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상이한 문화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특히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는 공간적 실천들, 예로 게토화, 이주, 통합, 분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Allen, 1997, 5). 또한 다문화공간과 관련된 지구적인 인적, 문화적 교류가 여전히 국민국가의 통제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예로, 지구화 과정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특히 자유무역, 자유시장의 개념에 함의된 자본과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진국들에서 이민자격의 조건을 강화한 이민정책 또는 개별 이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비자관리정책들은 지구적/국가적 규모에서 다문화공간의 형성을 특징지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문화주의와 정치권력 간의 관계는 규모의 다원성 또는 규모 뛰어넘기와 관련된 권력 유지의 담론에 적용될 수 있다. 예로, 필리핀 이주자들에 관한 타이너(Tyner, 2000)의 연구는 필리핀 정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화의 담론과 신체의 담론 사이를 용의주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다문화공간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규범적 윤리와 민주적 정치의 이상을 함의한다. 다문화주의 윤리를 반영한 다문화공간은 타자성 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인 타자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지만, 특히 주변적 위치에 있는 소수자 문화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경제적(자원 이용도 포함하여), 정치적 차이의 극복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공간은 지역 간 및 지역 내 사회문화적, 경제정치적 불균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공간은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다원성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는 '인정적 정의'의 공간을 지향하며, 정치적 측면에서 다문화공간은 구성원들에 대한 이러한 상호 인정(권리와 자율성)을 전제로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공간은 다문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공간의 형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공간의 이상은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주의 또는 이를 반영한 다문화공간에 관한 규범적 개념화는 현실의 경제적, 정치적 불균등과 그 발생 배경을 모호하게 하거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통해 오히려 갈등을 은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인간 조건을 특징지우는 갈등과 차이를 … 유예시키는 집단의 '보금자리'(home), 안전한 장소, 연대의 근원이 될 수 있다"(Entrikin, 2004, 20). 즉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을 위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문화공간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러한 지구적-지방적으로 다규모적인 장소만들기를 위한 실천을 통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문화공간의 형성 배경과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

1) 자본 이동 대 노동 이동과 다문화공간의 형성 배경

지구화는 시장관계의 지구적 팽창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구적 관철을 의미한다(Dreher, 2007). 이 과정에서 근본 요소는 시장메커니즘의 전제로서 상품화, 특히 자연과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의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직접 통합되고, 지역적, 국가적 노동시장은 지구적 노동시장으로 확장되게 된다. 노동시장의 지구적 통합은 노동력의 국제이주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노동력에는 직접적인 노동력과 재생산을 위한 노동력, 즉 직접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단순 및 전문직 노동력과 결혼을 통한 가정의 형성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결혼 이주자들, 그리고 노동력의 잠재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는 이주자 개인의 의지, 특히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와 관련된 지구적 배경과 이에 관한 통제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는 구조적으로 둔감하게 강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지구적 이주는 기본적으로 지구적 규모의 지역불균등발전을 배경으로 한다. 즉 자본 축적의 지리적 불균등은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부의 집중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여타 국가나 지역의 부의 유출과 사회경제적 침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지리적 불균등발전은 단순히 부의 유출/유입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의 유출/유입을 자극한다. 또한 일반 재화나 자본과 정보의 세계적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통한 지구적 규모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생산요소들의 국가적 및 국제적 통제는 불평등하게 전개된다. 예로, 재화의 자유이동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자본의 자유이동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보장되고, 촉진되지만, 노동의 국제이동은 대부분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즉 "지구화 프로젝트는 자유주의적 이상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축적 잠재력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자유와 관련된다". 물론 노동의 이동이 축적을 위한 자본의 자유에 조응하는 경우에 한해 촉진된다 (Overbeek, 2002, 75).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원료와 상품의 이동은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촉진되었지만,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대체로 최근 현상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선진국들에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은 이른바 노동의 신국제분업을 촉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국제분업은 노동의 국제적 이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80년대 들어 급속히 팽창한 금융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자본의 자유이동을 뒷받침했고, 자본의 지구적 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불균등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요소들의 추가적 이동을 촉발했다. 그러나 자본의 지구적 이동, 특히 생산설비 자본의 이동은 하비(Harvey, 1982)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해외 생산설비 투자는 일시적으로 이윤추구의 기회를 확대시키지만, 추가적인 지리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러한 생산설비의 해외 유출은 국내 생산의 공동화를 초래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적 침체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금융자본의 지구적 이동은 때로 (특히 투기적) 자기증식을 통한 이윤 추구를 가능하게 하지만, 생산자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또는 미래의 생산자본과 관련된 수입을 전제로 한 자본 이득은 경기변동에 극히 취약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생산설비자본 및 순수한 금융자본의 지구적 이동이 가지는 한계에 봉착하여, 자본 일반은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촉진하고, 특히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국가는 한때 엄격히 통제하던 노동력의 유입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점차 완화 또는 해제하게 되었다. 즉 경제침체뿐만 아니라 경제호황 상황에서도 노동력(단순 노동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숙련노동력을 포함)의 유입은 자본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은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이 생산설비나 금융자본의 지구적 이동을 상쇄시켜 이들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켰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은 재화, 생산설비 및 자본의 지구적 이동을 상호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요소들의 지구적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어떤 형태로든 오랜 역사 속에서 존재했으며,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도 노예노동의 강제 이주나 농업노동력의 자발적 이주가 있었다. 또한 서구 선진 자본주의국들에서 포드주의 단계에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동력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양적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공간적 이동에 있어서 한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상이하다[3]. 이러한 상황은 선진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와도 관련된다. 탈규제와 자유화, 유연화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조직된 노동의 협상력을 저해하고 임금인상 요구를 억압하면서, 다양한 비/반숙련노동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였고, 이에 따라 예로 의류산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을 전제로 한 과잉착취(sweatshop) 공장이 재등장하도록 한다(Louie, 2001).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단순 노동력의 부족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최병두, 2009a).

물론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은 단순 노동력뿐만 전문 기술직,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이주자들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은 국가적 및 지역적으로 제한된 노동시장을 여러 형태의 국제 이주에 의해 지구적 규모로 통합시키고 있다. 우선 포드주의적 생산체계의 발달과 본사/분공장의 공간적 분화, 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확산은 중간층 관리자 및 임원들의 국제 이주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포스트포드주의 이후 첨단기술산업의 발달과 서비스(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의 국제화는 기술 및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국제적 이주를 증대시킨다. 둘째, 선진국들에서 비숙련노동력의 수요 증대는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단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포드주의의 발달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에 따른 일부 국내 노동자의 해외 이주와 관련되지만, 또한 동시에 해외직접투자의 증대가 봉착하게 된 상대적 한계로 인해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유흥 및 오락분야 종사자들의 국제이주를 목격할 수 있다. 셋째 선진국들에서 출산력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잠재력의 저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바라는 국제결혼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대체로 가정의 구성과 가

족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에 종사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 편입된 일부 결혼이주자들은 직접 생산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넷째, 한편으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능력이 떨어진 제 3세계 국가들의 상황,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한 학생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 조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 형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은 사실 지구-지방화 과정 일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구-지방화 과정 일반이 드러내는 다양성과 다규모성은 자본이 그 내적 모순을 지연시키거나 대체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제솝(Jessop, 2002, 99)에 의하면, 지구-지방화 과정을 통한 자본의 역량 강화는 "지구적 규모에서 그 작동의 범위를 증대시킴으로써, 국지적인 물질적, 사회적, 시공간적 제약들로부터 그 작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공간적 및 규모적 노동분업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들을 상향적 및 하향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물질적 문제들을 미래로 지연시킴으로써, 장기적 기술예측을 촉진시킴으로써, 학습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상이한 시대적 지평을 재접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제솝은 자본의 이동이 영토적으로 차별화되고 파편화된 다른 유형의 통제들을 벗어나지 못할 때, 노동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지방적 적응과정 역시 이러한 자본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지구-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 자본의 축적 전략과 결합되며,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흔히 개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본과 국가가 얻게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한다(Rosewarne, 2001 등 참조). 첫째, 노동력의 유입은 자본과 국가로 하여금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단기적으로 줄여준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력(특히 단순 노동력)의 체류기간을 2-3년 정도로 제한한다. 둘째, 노동력의 유입은 자본으로 하여금 해외 유출 없이 특정한 노동 수요를 위하여 지구적 노동의 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특정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본의 유출 없이 (즉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지구적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노동력의 유입은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국가적 규범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동 일반의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즉 자본은 예로 임노동의 협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지렛대로서 이주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노동력의 유입은 자본으로 하여금 지구적으로 재입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재입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노동력의 유입은 자본에게 재입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통제 없이, 지구적 임금 격차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4].

이와 같이, 노동력의 국제이주와 노동시장의 지구적 통합은 자본의 지구적 이동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잠재적 이점을 자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와 노동력의 평가절하 가능성 속에서, 자본축적은 지구적 차원에서 불균등하게 지속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이 노동시장의 지구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노동이 완전히 상품화되거나 또는 상품 자체로 간주될 수 있을 때만 그렇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지구화는 일방적 과정이 아니며, 이주노동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다. 이주를 위한 기회의 제공은 노동으로 하여금 국가의 제약과 자본의 규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노동시장의 지구화가 국가의 규제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지구적 이동을 추구하는 자본에 대한 제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에 함의된 바와 같이, 노동력의 국제이주에 따른 문화의 국제적 흐름과 이에 따라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초국적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정력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력의 이용은 첫째 공적 서비스(교육, 훈련, 사회복지 등)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면해주지만, 이주자들에 대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인간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장기적으로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고용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장기

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 예로 생산설비의 자동화나 신규 사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이주 노동력에 의해 촉진된 생산의 활성화는 고용된 노동력(단순 및 전문직 직접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도)에 대한 임금의 일정 부분이 이들의 국가들로 송금된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시장의 형성과 확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규범적 함의와는 달리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마찰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정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의 지구적 이주는 제도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이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낸다. 노동의 지구적 이동은 어떤 의미에서 자본의 지구화 과정과 이로 인해 초래된 지구적 불균등 발전에 대한 노동의 자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지구의 모든 부분들에서 유용한 재화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유휴화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지구적 이동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거시적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요구와는 달리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노동의 유입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는, 한편으로 무역과 자본 흐름의 자유화 증대, 다른 한편으로 이주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유지 간 모순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제적 결함은 다규모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Willams, et al., 2004).

2)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다문화주의

초국적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노동력의 국제이주와 이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자본과 국가에 의한 일정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와 이에 따라 형성된 다문화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다음 절에서 주장할 것처럼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평등을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유래하는 개인들의 근본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규범적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교리 또는 다인종들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공간적 갈등의 통제의 전략으로서 사회적으로 동원되고 있다(Mitchell, 1993 등 참조). 지구적 규모의 이주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의 교리 또는 전략은 상이한 생활양식과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는 구성원들 간 공동체적 또는 다원적 사회공간의 형성을 위한 유일한 해법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리를 동원하여 다문화 사회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제함으로써 사회공간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본의 축적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예로, 당시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지구적 연계의 증대와 급속한 도시개발은 부유한 '아시아' 이민들의 유입과 홍콩 투자가들에 의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동반했다. 이로 인해 유입되는 자본과 이민들이 밴쿠버 도시 사회에서 원만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도시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주의는 밴쿠버에서 인종적 마찰을 원만하게 하고 도시환경과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시도와 연계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국제적 네트워크로 벤쿠버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인종과 민족의 개념에 대한 헤게모니적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Mitchell, 1993). 이러한 점에서, 미첼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란 '자본주의의 통합된 색채들'로 규정된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다문화주의를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로 간주하는 지젝(Zizek, 1997)의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오늘날 지구적 자본주의가 일종의 '부정의 부정', 즉 국가적 자본주의와 그 국제적/식민적 단계 이후의 단계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작단계에서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의 규정 내에 있었고, 국제적 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 그 다음 서구 선진 자본주의는 식민지 국가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식민화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최종 단계로 지구화 과정은 식민지들만 존재하고 식민 모국은 존재하지 않는 식민화의 역설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적 형태가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란 텅빈 지구적 위치(empty global position)에서 마치 식민자가 식민화된 사람들을 다루는 것처럼 - 원주민들의 관습은 주의 깊게 고찰되고 '존경되어야 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 각 국지적 문화를 다루는 태도이다"(Zizek, 1997, 43-44).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다문화주의는 법 앞에 시민들의 평등을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에서 유래하는 개인들의 근본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지구적 자본주의의 공간적 통합과 접합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주의는 유럽중심주의와 거리를 두는 척하지만 "다문화주의는 부정된, 역전된, 자기준거적 형태의 인종주의, 즉 어떤 거리를 둔 인종주의(racism with a distance)이다. … 다문화주의는 모든 적극적 내용을 가지는 자신의 위상을 비운 인종주의이다(다문화주의자는 직접적 인종주의자가 아니며, 그는 타자를 그 자신의 문화의 특정 가치와 대립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정 문화들을 적절하게 전유(그리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특권화된 보편성의 텅빈 위치를 가진다. 타자의 특이성을 위한 다문화주의적 존중은 그 자신의 우월성을 단정하는 것이다"(Zizek, 1997, 44).

다문화주의가 '자본주의의 통합된 색채들' 또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라는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인종적 문화적 측면만이 아니라 나아가 지구-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계급 질서의 재편과 관련된다. 한편으로 초국적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체현된 지구적 규모의 생산수단 소유자들로서 세계적 부르주아들이 등장하여 초국적 자본가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초국적기업의 확산, 해외직접투자의 급증, 국경을 가로지르는 기업인수·합병의 증대, 지구적 금융체계의 발달, 지구적 협력구조 내 위상들의 상호연계 등"을 통해 자본가들의 초국가적 통합을 촉진하고, 자본축적의 국가적 순환이라기보다 지구적 순환을 관리한다. 이들은 "국지적 영토성과 정치를 능가하여 지구적 체계에서 공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계급의 존재와 계급의식을 창출하고 있다"(Robinson and Harris, 2000). 반면 지구적 규모로 이동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아무런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지구적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자신들의 계급적 기반과 계급의식을 구축하기 어렵지만, 생산수단의 고정성에 대한 노동력의 유동성 간 모순을 창출함으로서, 경제체제의 지구-지방적 작동 메커니즘을 매우 불안정하게 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현실 자본의 축적 전략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란 국제적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키고 사회공간적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규범적 이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경제사회체제 하에서 초국적 자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교리 또는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문화주의 그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즉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왜 말하고자 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배경에서 발생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상이한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유들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밝히는 것은 의미를 경쟁적으로 재주창함에 있어 첫단계이다. 의제들을 풀어내고 물질적 이득을 밝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다문화주의와 같이 희망적이고 빛나는 개념들의 보다 긍정적인 해석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Michell, 1993, 288)[5].

다문화주의는 그 개념 속에 함의된 희망적이고 빛나는 윤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도 부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 즉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시작되어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지원 다문화 프로그램과 정책들은 최근 쇠퇴하게 되었고, 대신 동화 촉진을 위한 전략들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차이에 대한 교리는 예로 미국 교육계에서 차별철폐행동프로그램(affirmative action programs)을 통해 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권리에 대한 인식에 응용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초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번성했던 '차이에 대한 권리'(right to difference)라는 다문화주의적 담론이 시민사회에서 폭넓은 이해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970년대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던 다문화주의 교리와 전략들은 1990년대 초 신보수주의적 정책들이 강화되면서 점차 퇴조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제 이주가 20~3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증대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과 정책의 쇠퇴,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지원 다문화 프로그램의 축소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가적 지역적 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 호주, 여러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적극적인 성취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포기되고, 동화 촉진을 위한 전략들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로, 미국에서 이민자통합은 1996년 복지개혁법에 의해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이 법에 의해 시민과 합법적 이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와는 분리되게 되었고, 후자 집단들은 연방 복지혜택과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다문화주의는 점차 퇴조하고 있다. 동시에 동화가 그 녹슨 이미지를 벗어나서 주요 개념적 및 정치적 도구로 그 지위를 다시 얻고 있다. … 우리는 이러한 경향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인문지리학자들은 다문화주의에 반대되는 현대적 반격을 더 잘 파악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Mitchell, 2004, 641).

4. 인정공간으로서 다문화공간과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

1) 인정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

다문화공간은 구조적으로 자본 축적을 위한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으로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공간적 규범과 윤리가 함의되어 있다. 즉 다문화공간을 구성하는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타자성에 대한 상호존중은 비록 자본과 권력의 통제를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함의된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위한 투쟁은 현대 정치의 공통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비록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개인적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관한 포스트모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인종이나 여타 이유로 차별화된 소수집단들의 보편적 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예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본에 의해 암묵적으로 승인된 다문화주의와 시민사회와 외국인 이주자들이 함께 추진해가는 다문화주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로, 윤인진(2008b)에 의해 제시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구분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구분에 의하면,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의미하며, 캐나다나 호주와 같이 국가 건국과정에서 연방주의적이며 이중문화적인 정책을 국가차원에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원주민 및 이주민과 같은 소수집단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및 학자들이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윤인진, 2008b, 87)로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문화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문화 정책을 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주의를 '피동적'(또는 국가주도적, 정책적, 순응적) 다문화주의와 '능동적'(또는 시민주도적, 실천적,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참조). 피동적 다문화주의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주어진 이데올로기적 다문화주의로, 노동의 지구적 이동을 거시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

양한 인종과 문화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공간적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교리로서 작동한다. 이러한 피동적 다문화주의는 물론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inclusion)과 차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화(assimilation)주의, 즉 다양성을 거부하며 차이를 무시하고 분리시켜 사적 영역으로 추방함으로써 공적/사적 괴리를 은폐하면서 실제 이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 전략이나 담론과는 대조된다. 후자의 입장, 즉 동화주의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는 단지 사적 생활의 공간에서만 승인되며, 공적 영역에의 참여는 기존 규범과 가치에의 동화를 통한 시민적 필요 능력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피동적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차이를 승인하고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들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 시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진다.

능동적, 실천적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특정한 소수집단이 가지는 인종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보호에서 나아가 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 실천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 즉 능동적 다문화주의는 단순한 포용이나 차이의 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달성하는 것, 한 지역사회나 국가에 주어진 보편적 가정이나 가치, 또는 주류 집단들의 체현된 문화적 질에 대해 도전하여, 이 집단들이 체험하거나 상상하는 생활 경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집단들의 생활 경험이나 상상의 확장을 통해, 소수 집단의 질적 특성과 차이가 비난되거나 무시되어 사적_개인적 영역으로 추방되지 아니하고, 세계 속의 다양한 존재양식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공적 영역 내에서 시민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종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집단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주류집단들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소수집단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실천된다. 이들 양 부류의 사람들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억압 또는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은 단지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인정에서 나아가 이를 부정하는 (비록 가시적으로는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자본과 권력의 힘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능동적 다문화주의는 '인정의 정의' 및 '인정의 정치'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주류집단들의 정체성을 우선하고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종적 및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소수집단들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문화적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인정의 정의를 추구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정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정체성의 주장과 차이에 대한 인정의 요구는 단지 다문화주의뿐만 아니라 현대 사상과 정치의 공통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인정의 정의 또는 인정의 정치는 단순한 개인적 정체성의 인정 이상을 함의한다. 즉 다문화공간에서 정체성의 표현과 차이의 인정은 차별 철폐에서 나아가 개인적인 가치와 경험, 성격의 자유로운 표현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질과 이를 위한 참여 권리에 대한 주장들을 내포한다.

표 1. 피동적 다문화주의와 능동적 다문화중의

	피동적 (정책적) 다문화주의	능동적 (실천적) 다문화주의
목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승인과 공적 영역에서 참여 권리를 부여 받음.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인정에서 나아가 이를 부정하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저항
행위주체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일부 시민·종교단체가 시혜적으로 시행하며, 외국인 이주자는 피동적임.	주류집단의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종교단체들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능동적으로 공동 참여함
정책사례	- 자본의 시혜를 전제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자 지위 인정 -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참여 축제 등	- 자본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자의 노동 3권 보장(쟁취) - 원주민과 이주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

다문화주의에 함의된 이러한 인정의 정의 또는 인정의 정치는 테일러(Taylor, 1992)에 의해 우선적으로 주창되었으며, 차이에 관한 일단의 포스트모던 사회이론가들과 철학자들의 주장들을 포함한다[6]. 테일러에 의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주관적 관계에 의존하며,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테일러는 정체성의 사회적 인정을 중요한 도덕적 요청으로 내세우면서, 상호 인정을 토대로 모든 문화에 내재한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인정의 정치란 각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차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차이들을 모두 다 인정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계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 개념은 인정의 개념에 근거한 영의 사회정의론과 유사하다. 즉 차이의 인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영(Young, 1990)의 사회정의론에 의하면, 사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이질적 공중'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러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운동의 형태로 '차이의 정치' 또는 '인정의 정치'가 추구된다.

하버마스(Habermas)와 호네스(Honneth)에 의하면, 이러한 인정의 개념과 '인정의 정치'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테일러의 다문화주의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에서 나아가 마르크스와 헤겔에까지 소급된다. 즉 인정이란 타자와의 대상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상호보완적 과정이며, 자기의식은 타자와의 상호 보완적 행동의 구조, 즉 헤겔이 명명한 '인정을 위한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결과로 이해된다(Habermas, 1974, 147). 만약 이러한 투쟁에서 상호 인정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억누르고 거부하게 되면, 자아는 자기 삶의 불충분성, 즉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맑스의 노동 개념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즉 노동은 노동의 대상이 자연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행위를 전제로 한 공동주체들 간의 관계로 이해된다(Honneth, 1995, 147). 그러나 오늘날 물신화된 자본의 지배 하에서 소외된 노동은 이러한 상호인정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인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7].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에 함의된 인정의 정의 또는 인정의 정치는 단순히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승인에서 나아가 이러한 차이를 사회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자본에 대한 반대운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인정의 정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공간'(spaces of recogn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정의 공간으로서 다문화공간은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인종, 성, 또는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활동과 이들의 사회공간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정의 공간은 서구 자본주의 발달과 근대성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관련된다(Ghosh, 2000). 즉 다문화공간에서 표출되는 국가적 및 영토적 정체성과 시민적 권리들은 근대적 공적 영역의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즉 인정의 공간 개념은 근대 정치의 발달과정에서 누가 공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공적 영역에 적합한 활동이나 행동은 어떤 것인가, 공적 영역에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의 의문과 이의 제도화와 관련된다.

인정의 공간은 나아가 이러한 공적 영역의 개념을 능가하여, 탈근대성과 국민국가의 제약을 벗어나는 인정의 정치를 위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Staeheli, 2008). 첫째, 인정의 정치는 공적 및 사적 영역들 간의 역(閾)공간(liminal space)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분적으로 이는 인정을 위한 많은 투쟁들이 이 두 가지 영역들 사이의 경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정의 정치 운동은 국가와 제도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진 주변적 공간들에서 등장한다. 이 공간들은 국가와 자본주의적 힘이 느슨하게 조직된 곳으로, 빈민 지역이나 인종적 공동체에서 흔히 제기된다. 셋째, 인정의 정치는 지구화된 세계에서 인종, 계급, 성의 차이에 기초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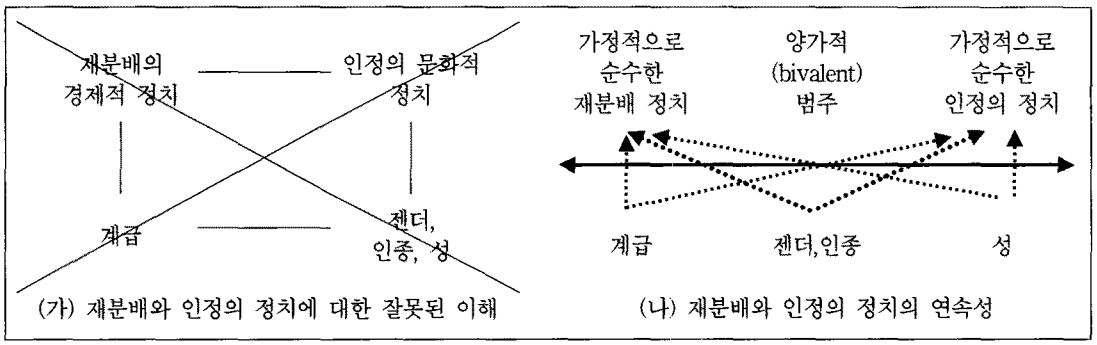
하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윤리를 제공한다(Morrison, 2003; Fraser, 2005).

2) 다문화공간을 위한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

인정공간으로서 다문화공간은 단순히 다문화적 이주자들이나 행위 주체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문화공간은 공적 공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아가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한 개인적 및 집단적 정체성의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실천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달리 말해 다문화공간이 아무리 규범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공간적 기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적 투쟁을 통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공간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문화공간과 이에 함의된 다문화주의는 초국적 자본과 제국적 권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공간은 단지 인종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다양한 정체성의 존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재분배에 대한 요구도 포함한다. 재분배와 인정은 다문화공간의 구축 나아가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서 두가지 기본 축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정의 정치는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의 차별에 근거한 사회공간적 부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억압과 지배를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또한 '자신의 행위의 행위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자 한다(Young, 1990, 37).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공간)적 정의는 물질적 가치의 분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영의 주장에 대한 반대로, 프레이저(Fraser, 1995)는 무형의 가치들만을 강조하는 인정의 정치만으로 사회적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물질적 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재분배의 정치는 사회의 정치경제구조에 뿌리를 둔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적 착취와 박탈, 빈곤과 주변화 등을 극복하고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노동분업의 재편 등을 추구한다.

프레이저는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가 분석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정의의 차원임을 강조한다.[8] 즉 세이어(Sayer, 2001)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와 경제, 또는 이들과 각각 관련된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는 흔히 이분법적으로 모형화 된다(그림 1-가). 이러한 이분법적 모형화는 영의 인정 정의론에 대한 프레이저의 비판적 고찰에서 지적된 것으로, 프레이저는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는 가정적으로 설정된 양 극단들 사이에서 서로 연속적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한다(그림 1-나). 예로, 계급, 젠더, 인종 그리고 성(섹슈얼리티)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4가지 유형 가운데, 계급은 재분배의 정치를 보다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반면, 성은 인정의 정치를 보다 긴밀하게 요구하며, 젠더와 인종은 재분배와 인정의 차원 모두에 유사한 정도로 관련된다. 즉 인종과 젠더 등은 양가성을 가지는 사회적 차이, 즉 문화와 정치경제의 어느 한 쪽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 뿌리를 둔 혼종적 범주로 이해된다. 인종이나 민족 등에 기초한 다른 정



자료: Sayer, 2001, 694에서 인용 (그림 (나)는 일부 수정한 것임).

그림 1.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 간 관련성

치들도 한 극단에 좀 더 가깝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위치지워질 수 있다[9].

이 논문에서는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이슈들에서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분석에 부적절한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서 '능동적' 다문화주의의 개념화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나 차이의 인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인정을 부정하는 자본과 권력의 사회적 작동 메커니즘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정체성이나 타자성에 대한 무시를 초래하는 사회적 억압과 지배는 단순히 무형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인정의 정의 없이 재분배의 정의만 강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문화적 가치와 이를 위한 공적 공간에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분배에 대한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분배의 정의는 인정의 정의를 전제로 하며,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즉 다문화공간에서 실천은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정의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재분배의 정치가 어느 정도 제도화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조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인정의 정치'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심보선(2007, 41-34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 표방되고 있지만, 실제 이주노동자 정책에서는 인정의 정치가 배제된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고찰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영옥(2007, 129)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역시 "전지구적 맥락 안에서 차이의 인식과 인정, 그리고 재분배를 둘러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주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 다문화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동화주의의 면모를 띤다"고 주장한다. 정미라(2008)은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비교 검토하면서, 이들의 "공통적 지반인 '차이'의 인정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지닌, 억압과 해방이라는 이중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정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인정의 정의를 위하여 재분배의 정의가 필요하며, 또한 역으로 재분배의 정의를 위해 인정의 정의가 필요함을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인정의 정치에 대한 중요성은 심지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도 적용되기도 한다(문성훈, 2005). 그러나 노동운동이 비록 인정의 정치를 함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분배를 요구하는 계급운동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타자성에 대한 인정 투쟁운동뿐만 아니라 생산영역에서 임금인상이나 자주경영에 대한 요구 또는 생활영역에서 소득 및 공공서비스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운동 등 모든 운동들은 인정투쟁을 통한 인정의 쟁취 없이는 해당 영역에서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즉 인정투쟁은 모든 유형의 운동에 계기적으로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탈지구화 시대는 자본주의의 지양과 서구화의 극복을 위하여 세계 경제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 공간의 편성을 요구한다. 지구-지방화 과정과 이로 인해 초래된 문화적 영향은 공간적 언어들에 의해 보다 적절하고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공간은 중요한 용어로 주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경험적 분석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공간의 개념화는 다규모적 방법론에 의해 보다 체계화될 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범세계주의, 초국가주의 등에서 제시된 공간적 개념들을 재검토, 수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공간의 개념이 한편으로 윤리적, 규범적 함의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 동안 지구화 과정에서 형성된 다문화공간과 이에 전제된 국제이주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추동력에 의해 촉진되고, 전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공간의 형성 메커니즘과 자본축적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비판은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이의 정치적 전용에 국한되며, 그 규범적 측면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다문화공간의 형성이 자본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불가피하게 조건지워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탈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다문화공간과 그 윤리로서 '인정의 정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다문화공간의 규범성은 기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지켜질 수 있다. 다문화공간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인정 투쟁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분배를 위한 투쟁도 요구되지만, 인정 투쟁은 모든 정치사회운동에서 전제되는 우선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주

1)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이주와 지역사회의 적응 과정(관련 정책을 포함하여)에 관한 연구와 개념화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 외에도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등 다양한 용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2) 베를린의 근린사회, Wedding과 이 곳의 거리인 Badstra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Uzer(2008)는 터키 이민자들이 당국에 의해 '고안된 공간'(conceived space)을 그들의 '생활된 공간'(lived space)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전략들 가운데 하나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며, 그 결과 터키 이민자들의 연령별, 성별 집단들에 의한 공간 전유를 통해 새로운 공간적 배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3) 그 외에도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초강대국들에 의한 군사적 및 경제적 원조의 철회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재분배를 위해 마련할 수 있었던 재원의 외적 근원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경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소득 기회의 확보와 생존(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람들의 강제 이동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Overbeek, 2002, 77).
4) 특히 국가간 환율이 개별 국가들 간 물가지수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발전국가들의 통화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지불하는 임금이 자국의 통화로 환전할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5) 이러한 점에서 지젝(Zizek, 1997)도 유사한 주장, 즉 "민족주의(국가주의)라는 오물을 버리고자 할 때, '건전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아이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과잉' 민족정체성과는 분리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범을 전제로 한다.
6) 예로, M. Young, N. Fraser, Benhabib, Honig, S. Mouffe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한 단행본으로, Fraser et al.(2003) 참조.
7) 인정의 일반적 개념이나 이론적 주장들과 더불어 특히 자연과의 관계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최병두(2009) 참조.
8) 프레이즈(Fraser, 2005, 1)에 의하면, 이러한 재분배 및 인정의 정의를 지구(-지방)적 차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재분배든 인정이든 계급적 차별이든 신분의 계층에 관한 문제이든 간에, 정의가 적용되었던 단위는 근대국가영토"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지방적 세계에 재분배 및 인정의 정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규모적 접근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9) 그러나 세이어(Sayer, 2001)는, 구체적인 정치적 투쟁들은 어느 정도 항상 양가적이겠지만, 이러한 개념화는 다양한 정치적 투쟁들과 이들의 문제들의 상이한 기원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에 근거하여 대안적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문 헌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문성훈, 2005, 노동운동의 이념적 자기반성을 위하여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인정투쟁'이다, 시대와 철학, 16(3), 181-212.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 201, 10(2), 41-76.

윤인진, 2008a,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문화역사지리, 20(1), 1-18.

윤인진, 2008b,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정미라, 2008,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 대한철학회

논문집, 107, 51-68.

최병두, 2009a,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69-392.

최병두, 2009b,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Allen, R., 1997, What space makes of us: thirdspace, identity politics, and multicultural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 March 24-28, 1997).

Brenner, N., 1998, Between fixity and motion: accumulation, territorial organization and the historical geography of spatial sc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16, 459-81.

Cidell, J., 2006, The place of individuals in the politics of scale, *Area*, 38(2), 196-203.

Crang, M. and Thrift, N. (eds),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Dreher, S., 2007, *Neoliberalism and Migration: An Inquiry into the Politics of Globalization*, Lit Verlag, Hamburg.

Entrikin, J. N., 2004, Democratic place-making and multiculturalism, *Geograpfisak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4(1), 19-25.

Fraser, N., 1995,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New Left Review*, 212, 68-93.

Fraser, N., 2005, Reframing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Left Review*, 36, 1-19.

Fraser, N., and Honneth, A.,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London and New York.

Ghosh, A., 2000, Spaces of recognition: Puja and Power in Contemporary Calcutt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6(2), 289-299.

Habermas, J., 1971, *Theorie und Praxis*, M. Schrkampf Verlag, Frankfurt; 1974, *Theory and Practice* (trans. by John Viertel), Heinemann, London; 홍윤기, 이정원 역, 1982, 이론과 실천, 종로서적.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최병두 역, 자본의 한계, 한울.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Oxford.

Honneth, A.,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Jessop, B., 2002, Time and space i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ir implications for state power, *Rethinking Marxism*, 14(1), 97-117.

Keith, Michael, 2005, *After the Cosmopolitan? Multicultural Cities and the Future of Racism*, Routledge, London.

Lefebvre, H., 1990,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Louie, M.C.Y., 2001, *Sweatshop Warriors: Immigrant Women Workers Take on the Global Factory*, South End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Mansfield, B., 2005, Beyond rescaling: reintegrating the 'national' as a dimension of scalar relat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458 - 73

Mitchell, K., 1993, Multiculturalism, or the united colors of capitalism?, *Antipode*, 25(4), 263-294.

Mitchell, K., 2004, Geographies of identity: multiculturalism unplugg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5), 641-651.

Morrison, Z., 2003, Recognizing 'recognition': social justice and the place of the cultural in social exclusion policy and practi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 1629-49.

Overbeek, H., 2002, Neoliberalism and the regulation of global labor mobi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581, 74-90.

Peck, J., 2002, Political economies of scale: fast policy, interscalar relations, and neoliberal workfare, *Economic Geography*, 78, 331 - 60

Robinson, W.I., and Harris, J., 2000, Towards a global ruling class ? globalization and the 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Science and Society*, 64(1), 11-54.

Rogers, A., 1998, The spaces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50, no.156, 201-213.

Rosewarne, S., 2001, Globalizati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formation - labor's challenge?,

Captialism, Nature, Socialism, 12(3), 71-84.

Roudonetof, V., 2005, Transnationalism, cosmopolitanism and glocalization, *Current Sociology*, 53(1), 113-135.

Sayer, A., 2001, For a critical cultural political economy, *Antipode*, 33(4), 687-708.

Smith, N., 1992, Geography, difference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Doherty J., Graham E., and Makeld M. (eds),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St Martin's Press, New York, 57-79.

Staeheli, L., A., 2008, Political geography: difference, recognition, and the contested terrains of political claims-mak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4), 561-570.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tics of sclae, in Cox, K.,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New York, 137-66.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in P. R. Magocsci (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Univ. of Toronto Press, Toronto.

Uyesugi, J.L. and Shipley, R., 2005, Visioning diversity: planning Vancouver's multicultural communities,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10(3-4), 305-322.

Uzer, F., 2008, *Production of Multicultural Space by Turkish Immigrants*, VDM Verlag.

Willams, A., Balaz, V., and Wallace, C., 2004, International labour mobility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1), 27-46.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Zizek, S.,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28-51.

(접수: 2009.8.17, 수정: 2009.9.22, 채택: 2009.10.16)